

신임 농림장관, 위기속 농축산업 활로 찾아줘야

지난 8.7개각에서 예상치 못했던 한갑수 신임 농림부 장관의 등용은 농업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전임 김성훈 장관의 정책운용이 환경친화적 농업의 구현에 맞춰져 질적인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양적 측면의 농업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축산현장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등 국내 농축산업계의 처지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기존의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힘없는 1차산업계가 희생양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과 얼마 전 한승수 통상교섭본부장의 소탐대실 등 농업 경시 발언은 물론이고 앞으로 다가올 WTO 차기협상, 중국의 무차별적인 농축산물 수입강요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팀과의 조화있는 농정운용 전개 발언 등은 우리 농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신임 한갑수 장관께서는 이러한 업계의 정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관찰,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한 농정을 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다.

특히 축산업계의 경우 농·축협 중앙회의 통합은 물론이고 구제역 파동,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등 그동안 각종 사고 및 현안문제로 인해 피폐해져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취임사에서 전문경영인 출신으로서 기업마인드를 농업에 도입, 수지맞는 농사, 항구적인 안전영농대책 추진을 주창하셨듯이 국내 축산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

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정책을 추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 내지는 최소한 미국, 유럽 수준까지는 간소화시켜 경쟁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축산업이 개방압력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외식업소에서의 외국산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의 확대 관철, 포장유통의 의무화 등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하는 사안이다.

우리 계육업계만 해도 벌써 국내 닭고기 소비량의 23%를 외국산 닭고기에 잠식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다. 더욱이 중국산 가금육마저 수입이 재개돼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외산 닭고기로 인한 국산 닭고기시장의 잠식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홍보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눈을 해외로 돌려 닭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특히 농민 및 관련단체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 매진하는데 이를 방관 내지는 무시로 일관하는 농정당국에 대한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장관께서는 취임사에서 주창하셨듯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기업마인드를 농축산업계에 도입, 공격형과 방어용 품목의 육성을 구분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진정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어떻게 농정을 이끌어 가는 것이 국내 농축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충분한 의견수렴과 분석검토를 통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